



■ 토 론 4.

# 귀촌귀농인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최 태 영**

진안군뿌리협회  
상임대표





# “귀촌귀농인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최태영(진안군뿌리협회 상임대표)

## 1. 지자체의 발빠른 시도와 경험 vs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의 뒤늦은 대책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명제는 아니었으나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및 농촌창업 지원'이라는 보다 폭넓은 개념의 도시민유치지원정책을 6년째 수행해 온 진안군과 진안군뿌리협회로서는 도립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뒤늦게나마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귀촌귀농인의 역할에 기대하는 연구를 시작하였음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선협( )의 축적된 성과와 진화과정이 활용되지 못하고 원론 수준에 머문 논문을 접하고, 작은 지자체와 광역단체(산하 연구기관)의 현실감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하면서도, 가려운 데를 긁어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 ① 서론에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라고 밝히면서도 발제문 전체를 통틀어 모범적 실례는 별로 예시하지 못했고 구체적 방안 또한 제시하지 못 하였음과,
- ② “제2장 충남지역의 귀촌귀농 정착형태”에서 표본으로 사용한 기초조사 결과는 불과 70명(4개 시군을 합하여)의 응답을 기초로 한 빈약한 것이어서 통계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준이었음이 더욱 아쉽습니다. (본론이라 할 제3장의 주제와는 어차피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제 2장 전체를 삭제했다면 이런 아쉬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 ③ 소소한 것이지만, “문화 및 교육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언급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50대와 60대의 응답자가 61%가 넘는(비록 70명에 불과하지만) 점은 감안하지 않고 ‘문화/교육에 대한 아쉬움의 토로가 없었으니 그 분야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요?
- ④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발제자의 시각처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탈출구” 정도로나 본다면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취약계층을 위한 일’만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농촌)사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그러한 서비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생각을 확장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 ⑤ 귀농인을 ○○형, △△형 등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이는 의미도 없거니와, 농촌(인)을 정책대상 또는 이론의 실험대상으로 보는 정책가와 학자들의 오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류'하는 목적이 유형별로 어떻게 대우 또는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 2. 귀농귀촌 현상에 대해 정부(중앙, 광역, 지방)의 정책은 필요한가?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잠시 접어두고, 우선 "도시민이 농촌생활을 선호하게 된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에 대해 과연 공공차원의 정책, 대책, 지원 등이 필요한가?" 라는 근원적 의문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봅니다. 농촌생활 6년째, 귀농귀촌정책의 민관협력 파트너로 활동한 지 5년째인 저의 입장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심각하게 자문자답해 온 화두였습니다. 구두선에 불과한 지자체 수장의 선전, "농촌에 가면 블루 오션이 기다린다" 라는 중앙정부의 홍보, 시골에 가면 해방군처럼 환영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도시민들의 과대망상, 극히 소수의 세속적으로 성공한 귀농인만을 띄워 올리는 언론매체의 연출된 흥미위주 보도, 선물 나눠주기 일변도의 관 주도형 소모성 귀농축진 이벤트... 벌써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지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도시민이 농촌으로 가면 행·재정적 지원이 당연히 따라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런 시류를 타고 학자들 중에도 덩달아 '귀농귀촌학'의 창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작 농촌생활의 ABC도 모르고, 농촌인들의 정서에 접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탁상 이론에 근거한 실효성 없는 귀농지원정책(농업농촌정책)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발의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까지 한답니다. 왜, 도시집중을 지원하는 법률은 없었는데도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들어 살게 되었을까요?

나. 저는 3천여 건이 넘는 예비귀농자 상담을 통해 "귀농귀촌은 자기 자신의 근원을 찾아 돌아가는 길이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치열하게 궁구하여 결론을 얻은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려 애써왔습니다. 단순히 '지원금 얼마를 준다니까', '생계나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니까', '자연환경을 즐기며 혼자 살기에 적합하니까', '도시의 삶에 진저리 나서', '도시에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서'... 농촌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귀농(촌)을 말렸습니다. 스스로 '진입장벽의 악역'을 한 것이지요. 어떤 예비귀농자들은 '진안은 귀농을 거부한다는 뜻이냐'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저희 협회는 이런 기초를 굽히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쏠쏠한 필터를 뚫고 최근 10년 동안 9백여 가구가 전입해 왔으니 많이 들어온 셈이고, 그분들은 농촌사회의 미래를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다. 하나의 트렌드로서 농촌으로 가는 길이 밀리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는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귀농(촌)은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이사하는 것이라고 볼 때,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든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기존 농촌인들에게 농촌을 버리지 않아 온 댓가를 보상하지 않는 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에게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은 형평성의 문제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 3. 사회적경제의 실현

가. '사회적경제 실현'을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한 번 자본주의적 발상(즉, 공동체적 소득이든 개인적 소득이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정부정책의 지상목표라는)에 함몰된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경제에는 반드시 화폐가치로만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사회적경제라는 명제는 세상의 어떤 정부도 실현해 내지 못했다는 점과, 그것은 실적에 급급한 행정의 간섭과 인간의 정서를 무시한 각종 이론에 입각한 정책 때문이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동체경제의 당위성이나 가치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유독 농촌에서만 사회적경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한 번 농촌을 이론의 실험장으로 보겠다는 것인가? 라는 강한 반발을 유발하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 발제의 내용은 여러 번 되풀이 읽어 보아도 "귀농귀촌인을 사회적경제구조 만들기의 주체적 활동가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인지, "귀농귀촌인(아마도 여기서는 도시의 경쟁구조에서 이탈한 그룹을 지칭하는 듯)을 사회적경제의 수혜대상집단으로 보아 그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고 뒤섞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는 전자 즉 "귀농귀촌인의 역량을 활용한 농촌지역 사회경제 활성화의 핵심자원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합니다.

다. 진안군의 경우 "농사 경험이 없다면 전업농을 위하여 농촌으로 오는 것은 위험하다, 도시에서 습득한 재능과 전공을 살려 농촌에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분야를 확보해 가라, 그것이 정착 성공의 첩경이며 진안군이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핵심이다"라는 내용의 귀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예가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마을간사제도'일 것입니다.

- ① 창업지원 프로그램 :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활동은 참으로 범위가 넓어서 농가공·판매유통 등 농업주변 활동은 물론, 문화·예술·교육·건강복지·농촌정서회복·자원재생·민속복원·생태환경 지도제작·카페및펜션경영노우하우의전수·외국어통번역·지역화폐... 등 농촌사회 인프라를 구성

하는 거의 모든 분야의 활동을 망라하고 있습니다(별첨 참조). 진안군의 마을만들기가 추구하는 '살기 좋고 살고싶은' 농촌사회의 모습(즉, 사회적경제가 실현된)을 미리 그려 놓고 각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해 줄 도시민 인재를 구했던 셈이지요.

- ② 마을간사제도 : 발제에서도 인용한 농어촌관광체험마을 등을 운영할 사무장(매니저)에 해당하는 진안군 독자적 제도. 그러나 보다 폭넓은 마을개발의 협력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 특히 위 ①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그러한 활동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민의 반응을 보아가며 확산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업( )으로 삼아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마을만들기(귀농)정책 담당의 의도였습니다. 한편으로 '그 활동이 정말 농촌사회에 필요한 분야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조직이 흡수하여 제대로 된 업무부서를 신설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후계인력의 유입'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여타 지자체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독창적이고 앞선 아이디어라고 많은 외부인들(특히 연구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 그런데, 5년간 계속된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론적으로만 화려했던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자평합니다.

- ① 귀농인 개개인에게 지원한 금액이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창업에 이른 경우는 전무했다는 점.
  - 2012년 총예산 30백만원(1인당 최고 1천만원, 4명 수혜),
  - 2011년 총예산 30백만원(6백만원, 5명 수혜),
  - 2010년 총예산 31백만원(7건, 평균 4.4백만원),
  - 2009년 총예산 65백만원(20건, 평균 3.2백만원),
  - 2008년 총예산 21백만원(11건, 평균 1.9백만원). 등.
- ② 접근하기 쉬운 비슷한 유형의 활동에 집중된다는 것(예 : 식품발효, 포장재 개발 등).
- ③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점(예 : 천연화장수 개발로 몇 명에게 제조법을 확산시켰는지, 효과는 어떤지, 수혜자가 창업할 계기를 확보하였는지 등).
- ④ 수혜자가 자신의 인건비(강사료 등)로 상당 부분을 집행함으로써 원래 기대했던 사업 효과는 떨어짐.
- ⑤ 적극적 창업을 전제한 수순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알려 취업(강사료 수입)의 기회로 삼으려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음.
- ⑥ 귀농준비자금이 워낙 열악하여 창업에까지 이르기 힘들다는 귀농자 일반의 경제적 능력수준과, 현 농촌의 경제규모로는 창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간과했음.
- ⑦ 행정 내부에 새로운 업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었던 것은 행정 내 각 부서와의 횡적협업의와 사전설득이 필요한 작업이었으나 귀농업무담당의 정치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음.
- ⑧ 지역사회기여 활동은 귀농인만 하는 것이냐 라는 기존주민들의 빈축과 반발에 부딪침.

바. '새로운 지역리더로서 귀농귀촌인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시각도 농촌(인)정서의 이해가 부족한 자세라고 봅니다. 농촌관광체험사업의 운영자로서 귀농인의 재능을 충분히 수혈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이것은 전문인력이지 리더는 아닐 것입니다. 리더여서도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을 경영의 주도권을 '외지인' 마을간사에게 호락호락 넘겨줄 주민이 있을까요?

진안군에서 마을사무장을 역임한 저로서는 마을간사제도도 절반의 성공 정도로만 평가합니다. '마을간사=마을머슴'이라는 근거없는 등식에 함몰되어있는 주민들과 마을간사 간의 갈등, 그러한 풍토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곳곳이 버티며 살아남을 것이 요구되는데 단지 '생계를 보장받는 직업인'이라는 자세로 농촌사회에 적응하기는 힘들지요. 마을간사제도를 창안한 정책입안자 스스로도 "좀더 인성과 품성을 고려한 강력한 정신교육이 필요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탁상이론에만 근거한 정책의 한계를 토로한 셈이지요.<sup>18)</sup>

사. 발제문 중의 "은퇴자들의 경우...(중략)... 컨설팅을 하는 프로보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든지 "취업이 녹록치 않아 지역에서 살고자 내려온 청년 귀촌자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하여...(후략)" 와 같은 언급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김종수박사의 발제 내용은 제2차 지역상생포럼(호남권, 2012.8.9)에서 발제되었던 "귀촌귀농인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가공/창업 활성화(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와 비슷한 맥락의 초보적·원론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농촌을 대상으로 원론수준의 정책을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후유증으로 상처회복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등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① 농촌사회는 일부 행정가나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다양하고 다원적 가치를 동시에 보유한 사회인데, 특히 농촌인의 정서와 농경문화라는 특성을 이해한 위에서의 접근이 아니면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음. 특정한 귀농인(그룹)에게 사회적경제를 일구어 낼 미션을 부여하고 그 활동댁가로 일정한 보수(일자리)를 보장한다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체제 아래 '도시생활 낙오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거나 한다면 이는 기존 주민들의 강력한 정서적 반발과 장벽에 직면할 우려가 큼.
- ② 귀농귀촌(인)을 어느 분야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근원적인 고민꺼리임. 인구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촌지자체의 책임으로만 하기에는 인구의 분산배치와 지방화라는 국가적 명제를 생각할 때 농촌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임.

18) 경북 상주시의 경우 진안군의 마을간사제도를 수입하여 6명의 간사를 채용, 운영한 바 있는데 6개월이 채 못 되어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과 한계 안에서 진안군과 뿌리협회는 '교육지책'이라고 할 몇 가지 원칙을 지켜왔는데, 첫째가 귀농자 개인에게는 현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선언'한 것이고, 둘째가 집토끼(이미 와 있는 귀농인) 지키는 것을 산토끼(신규 귀농인) 잡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임. 마을만들기를 위한 도시민 '인재'유치의 일환으로 시작된 진안군의 귀농귀촌정책의 원칙이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유인책도 아닌 것으로서 이른바 '인기없는' 정책임.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이 시사하는 특별한 점은, 귀농귀촌이 재정적 지원을 전제하거나 개인적 안락을 목표로 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상을 농촌에서 실현하겠다는 결론을 얻은 사람만이 자신의 책임으로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강한 자재울( )과 도덕률을 요구한다는 점이며, '근자열 원자래( )'의 원칙에 따라 이미 귀농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군이 '홍보'하거나 '모집'하지 않더라도 유유상종의 추종귀농·동반귀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귀농=삶의 근원을 찾아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을 정립하고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최종목적이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지가 농촌이라는 것, 그러한 철학이 없다면 귀농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sup>19)</sup>하고 있음.

이것은 하나의 인생상담으로서, 이론이나 정책이 아닌 인간적인 접근이었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예비귀농자들에게는 반성과 깨달음을 얻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고도 자부함.

③-1 사회적경제를 확립하는 일을 포함하여 모든 농촌기여적 활동은 자각된 개인(귀농인)이 자비를 투입하여 스스로 시작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은 없음.<sup>20)</sup> 기존 주민과 연대할 것과 작게 시작할 것, 중간지원조직의 역내자원정보 제공활동 등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적극 동의함.

③-2 내생적 발전이론을 말하면서도 농촌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그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내놓곤 한 것이 농촌의 자립과 자발성을 저해했고, 예비귀농자들의 의타심 또는 농촌에 대한 기대와 오만(?)을 키워 온 것도 사실임. 정부(중앙, 광역, 기초 공히)도 국민의 행동동기가 오로지 '돈'에만 있다는 듯이 (재정적)지원을 앞세워 국민의 수준을 낮춰보지 말고, 정부답게 '국민의 건강하고 자발적인 활동'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도록 정신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역할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임.

④ 물론, 지원 없이 '자각된 개인의 자발적 행동'에만 의존한다면 신속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지원의 조건으로 신속한 성과를 바라는 것이 행정의 속성이고 그 결과는 뿌리가 허약한 전시성·소모성·일과( )성에 그치고 마는 것은 술한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는 사실. 발제에서는 사회부조와 윤리소비의 분위기가 형성된 곳으로서 원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원주가 그런 분위기가 된 것에는 수 십 년의 역사가 있었음. 지원이나 보장을 받고 들어간 귀농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하던 분들이 하나 둘 모여 살기

19) 진안군 귀농상담의 주 내용인 이러한 형태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조직보다 민간(단체)이 더 적합함.

20) 예 : 진안군의 이\*철(학선리 마을박물관과 노인대학), 김\*연(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등.



시작하면서 자본적 융합이 아닌 심정적·정서적·철학적 연대로 뿌리가 튼튼한 오늘의 원주를 만들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임.<sup>21)</sup>

- ⑤ '성과'를 언급한 김에 조금 더 부연하자면, 농촌사회에 어떤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려 할 때 빠른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됨. 농촌은 그리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너무 쉽게 변할 때는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선진국의 예에서 표면만 복사해 온 정책이나 설익은 이론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실험하듯 또는 혁명하듯 함부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농촌은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와 같은 곳이며 또 그러한 곳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임.
- ⑥ 발제의 "사회적경제 실현"은 단편적인 전문성을 활용하는 진안군 프로그램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수혜자가 되는 등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영역일 것임. 그렇다면, 오랜 과거부터 있어온 작은 공동체단위의 두레, 상포계, 갑계 및 최근에 형성된 작목반, 영농조합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의 폐쇄성, 배타성, 소집단 이기주의(?), 칸막이 문화, 자연과 인연 등등 정서적인 면에서의 단단한 융(결)합이 바탕이 되어야 함. 단지 경영경험, 회계학, 마케팅, 인사관리, 해외 견문 등 단편적인 이론과 전문성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텃세'로 표현되는 농촌인의 '비합리성(여러 의미에서의)'을 넘어설 수 있는 인륜(간)적, 정서적 자질도 함께 갖춘 인재를 찾아내거나 육성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문제로서 이러한 귀농귀촌인들을 환영할 수 있는 농촌 분위기의 조성을 병행하여야 함.

아. 결어와 대안 :

- ① 사회적경제구조를 확립하자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그 핵심리더 또는 수혜자가 귀농귀촌자여야 한다는 데에는 농촌사회의 정서로는 반드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시민의 재능이 필요한 활동영역이 농촌사회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가 귀농인의 역량을 수혈받아 보려고 도시민인재유치정책을 펴던 것인데, 인간의 정서를 무시한 이론적 접근이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게 한 원인이었음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 ② '도시인재가 일자리라든가 재정지원 때문에 농촌으로 유입될 것이며 농촌인들이 그런 귀농인들을 구세주처럼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합니다.  
농촌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농촌인'이 되도록 하는 교육이 먼저 필요합니다. 농사법 같은 것 말고 '인간성 회복 교육, 대인관계 함양 프로그램' 등 정서적 문화적 정신적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천박하고 한계도 분명한 재정적지원 또는 단위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21) 실제로 귀농인들 상호간에도 연대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감안하면 원주나 홍성군 홍동면의 경우는 대단히 특별하다 하겠다.

'교육'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경제규모 세계10위 국가'의 정부답게 '삶의 보람', '진정한 내면의 기쁨' 등 정신적 변화와 각성을 유발하는 국민적 학습프로그램이나 사회변화운동을 장기적 안목에서 펼쳐야 할 것이고 그에 의한 변화와 각성이 귀농귀촌 실행으로 또 광범위한 농촌사회 기여활동이라는 자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성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 ③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농촌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핵심리더의 존재만이 필요한 줄 알고 도시인재(리더)의 육성, 교육, 파견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사람(리더)의 열 걸음'도 중요하지만 '열 사람(풀뿌리 민중)의 한 걸음'도 중요합니다. 리더는 팔로워 또는 동료의 존재가 있을 때 비로소 지도력의 발휘가 가능합니다.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의 기존 리더들 뿐 아니라 일반주민의 이해·환영·동조·협력 분위기 조성이 더욱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활동주체이자 수혜자인 그들이 데면데면해서야 누구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어떤 명제이든)인지 주객이 전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리더양성교육보다 풀뿌리주민들의 "평생학습('교육'이 아니라)"이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역시 장기적 안목으로 길게 보고 접근하는 느긋함이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선진지역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 진 곳은 없고 길게는 수 백 년, 짧아도 수 십 년의 시행착오의 역사를 거쳤으며 지금도 역시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 ④ 끝으로 본 포럼의 주관기관에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앞으로도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적인 사업(활동)아이디어가 거론될 때마다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활용하자',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해 주고 핵심리더로서 그런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럼은 자꾸 열 필요가 없겠습니다.